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필수노동자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 및 직업군을 필수노동자(key worker 혹은 critical worker)로 지정하고, 이들에게는 봉쇄 정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자녀의 대면교육을 보장함으로써 육아부담 없이 근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이 직면한 위험과 필요한 처우개선 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의 필수노동자에 포함되는 부문 및 직업군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이에 속하는 노동자의 규모와 코로나19 관련 건강 및 근무여건 등을 살펴본다. 이어서 임금,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비자발급 및 연장 문제 등 필수노동자와 관련한 최근 이슈들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영국의 필수노동자 현황

필수노동자에 포함되는 부문 및 직업군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총 8개 부문의 일부 직업군을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노동자로

정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 간병인 등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청소부 및 운반원 등의 지원인력과 의약품 및 보호 장비 공급자 등 폭넓은 직업군을 필수노동자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 및 보육 부문에서는 교사·보육 교사 및 관련 지원인력 등이, 주요 공공서비스에서는 사법제도 관련 필수인력, 종교계 직원, 주요 일선 업무 및 사망자 관리업무 수행직원, 공영방송 관련 직원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에 극히 중요한 행정직업군이나 보조금 지급과 같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만 필수노동자에 해당된다. 또한 치안 및 국가안보 부문에서는 경찰, 국방부 직원, 소방·구조 관련 직원, 국가범죄수사국 직원, 그리고 국경보안 및 교도소 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식품 및 필수재 부문의 생산·유통·판매자 및 배달원 등과 육해공 및 철도를 통한 운송 부문 관련 종사자들도 필수노동자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사업, 커뮤니케이션 및 금융서비스 부문에서는 유류, 가스, 전기, 수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직업군, 정보통신 기반시설 관련 및 우편서비스 직업군, 그리고 필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해당된다.¹⁾

필수노동자 규모²⁾

영국 통계청(ON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영국의 필수노동자 수는 1,06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33% 수준이다.³⁾ 이를 부문별로 보면 보건복지 부문에 속하는 노동자가 약 31%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교육 및 보육 부문이 20%, 공익사업·커뮤니케이션 및 금융서비스 부문이 16%, 그리고 식품 및 필수재 부문이 14%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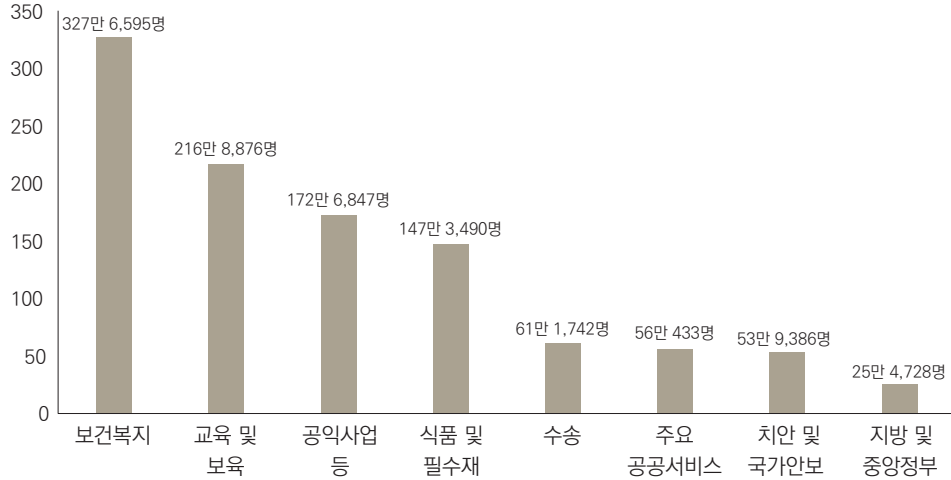
1) 영국 정부 홈페이지, “Guidance: Critical workers who can access schools or educational setting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onavirus-covid-19-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guidance-for-schools-colleges-and-local-authorities-on-maintaining-educational-provision>

2) ONS(2020.5.15), “Coronavirus and key workers in the UK”,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articles/coronavirusandkeyworkersintheuk/2020-05-15>

3)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정의한 필수노동자에 해당하는 부문 및 직업군을 2007년 기준 표준산업분류 및 2010년 기준 표준직업분류에 대응시켜 필수노동자 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1] 영국의 부문별 필수노동자 수

(단위: 만 명)



주: 2019년 기준.
자료: 영국 통계청(ONS).

필수노동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성이 58%, 남성이 42%로 비필수노동자(여성 42%, 남성 58%)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부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교육 및 보육 부문과 보건복지 부문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각각 81% 및 79%에 달한 반면, 운송 부문에서는 90%가 남성이었다. 한편 인종별로는 필수노동자 중 백인의 비율이 86%에 달했는데, 특히 운송 부문(93%), 교육 및 보육 부문(91%), 지방 및 중앙정부(90%) 등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및 근무여건 등⁴⁾

영국 정부는 천식, 심장병, 당뇨병 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통 정도의 위험(moderate risk)'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매우 제한적인 목적 외에는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필수노동자 중 이와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동자의 비율은 2019년 기준 15%로 비필수노동자(14%)에 비해 약간 높았고, 특히 지방 및 중앙정부(19%)와 주요 공공

4) ONS, 앞의 보고서.

서비스(17%)에서 높았다.⁵⁾

하지만 필수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필수노동자 중 20%가 2019년 중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필수노동자는 1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운송 부문과 치안 및 국가안보 부문의 필수노동자는 각각 5%만이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필수노동자 중 16%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정부는 봉쇄정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필수노동자의 자녀에게는 대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교육 수요를 예상하기 위해 필수노동자의 유아부담을 살펴보면, 이들 중 31%는 5~15세 사이의 자녀가 있고 16%는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계 중 편부모이면서 필수노동자인 경우는 6%, 부부가 모두 필수노동자인 경우는 9%였다.

■ 영국의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

필수노동자의 임금 수준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최근 태도 변화

영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의 최근 연구⁶⁾에 따르면 필수노동자들의 지난해 임금 중위값(median)은 시간당 12.26파운드(한화 약 18,400원)로 여타 노동자(13.26파운드, 약 19,900원)에 비해 약 8%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식품 및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필수노동자 중 3분의 1은 임금이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 5천 원) 이하인

5) 영국 정부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통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필수노동자 중 70세 이상의 비율은 약 1%(1만 3천 명)로 비필수노동자(2%)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Independent(2020.4.23), "One-third of key workers earn £10 an hour or less, study finds",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key-workers-pay-national-living-wage-ifs-report-a9479086.html>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 통계청의 보고서⁷⁾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식품 및 필수재 부문에 속하는 필수노동자의 경우 소득 10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달하는 반면, 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여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복지 부문의 필수노동자는 소득 10분위와 1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8%로 나타나는 등 같은 부문 내에서도 임금 수준이 다양했다. 주로 간병인들의 임금이 낮은 편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은 잉글랜드 내 간병인들 중 75%가 시간당 9.5파운드(약 14,300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⁸⁾

한편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그들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영국 정부의 다소 일관성 없는 태도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우선, 2020년 7월 21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중요한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인, 교사, 경찰, 의사 등 약 90여만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임금을 직업별로 2~3.1% 인상하였다.⁹⁾ 하지만 11월 25일 정부지출 검토(Spending Review)¹⁰⁾에서는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장관(UK chancellor)이 민간부문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도움이 절실한 부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 공공부문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¹¹⁾ 이렇게 되면 연소득 2만 4,000파운드(약 3,600만 원) 이하인 210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이 최소 250파운드(약 38만 원) 인상되고 국민건강서비스(NHS) 직원의 임금도 인상되나, 교사,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최소 130만 명에 이르는 필수노동자의 임금은 동결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에 대해 영국 일반노동조합 GMB는 “팬데믹 중 모든 것을 희생한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전에도 GMB가 “공공부문 임금 상한에 대항하여 싸웠고 승리한 적이 있음을 재무장관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 및 상

7) ONS,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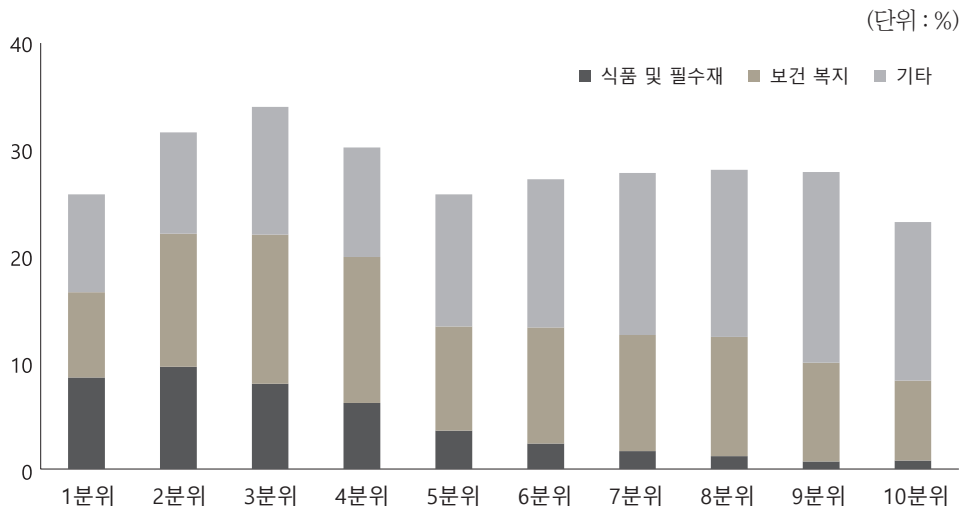
8) The Guardian(2020.11.13), “Three-quarters of England’s care workers earn below ‘real’ living wage”,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nov/13/three-quarters-of-englands-care-workers-earn-below-real-living-wage>

9) 영국 정부 홈페이지, “Pay rises for doctors, police and more in the public sector”, <https://www.gov.uk/government/news/pay-rises-for-doctors-police-and-more-in-the-public-sector>

10) 2021~22 회계연도 중 부처별 예산 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발표한다.

11) BBC(2020.11.26), “Union backlash over public sector pay freeze”, <https://www.bbc.com/news/business-55081222>

[그림 2] 영국 필수노동자의 임금 분포



주: 1) 각 10분위에서 부문별 필수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2) 2019년 기준.

자료: 영국 통계청(ONS).

업서비스노조(Public and Commercial Services Union)도 이번 임금동결이 공무원과 기타 공공부문 종사자들로 하여금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하고 공공부문의 불안을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운송노조(Rail, Maritime and Transport Union)는 즉각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영국 보건복지부가 2020년 9월 25일에 발표한 보고서¹²⁾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고령자 및 특정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 그리고 필수노동자 중 하나인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그 이유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 등이 코로

12) Department of Health & Social Care(2020.9.25), "JCVI: updated interim advice on priority groups for COVID-19 vaccination",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ority-groups-for-coronavirus-covid-19-vaccination-advice-from-the-jcvi-25-september-2020/jcvi-updated-interim-advice-on-priority-groups-for-covid-19-vaccination>

나19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이들이 감염될 경우 바이러스가 다른 취약 환자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서비스(NHS) 등 영국 의료체계 전반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병인 등 복지 부문의 필수노동자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0.3.9~5.25 기간 잉글랜드 및 웨일즈 내 복지노동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¹³⁾을 보면, 남성은 10만 명당 50.1명, 여성은 19.1명으로 20~64세 전체 인구(남성 19.1명, 여성 9.7명)보다 크게 높았다.¹⁴⁾ 그리고 Ladhani S. N et al.(2020)¹⁵⁾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런던 내 6개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환자 중 39.8%와 직원 중 20.9%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요양시설 직원의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보다 많은 필수노동자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영국 일반노조(GMB)의 필수노동자 조직가인 롤라 맥에보이(Lola McEvoy) 등은 최전방 의료 및 복지인력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병원 내 비의료인력도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료 부문에 속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필수노동자라면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영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보안직원(남성 기준 10만 명당 74.0명), 버스운전사(44.2명) 등의 코로나19 관련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13) ONS(2020.6.26), "Coronavirus(COVID-19) related deaths by occupation, England and Wales: deaths registered between 9 March and 25 May 2020", <https://www.ons.gov.uk/peoplepopulationandcommunity/healthandsocialcare/causesofdeath/bulletins/coronaviruscovid19relateddeathsbyoccupationenglandandwales/deathsregisteredbetween9marchand25may2020>

14) 한편 의료 부문 남성 및 여성 노동자의 사망률은 10만 명당 각각 30.4명 및 11.1명으로 복지 부문 보다는 낮았지만, 20~64세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높았다.

15) Ladhani S. N, J. Y. Chow, R. Janarthanan et al.(2020.9), "Investigation of SARS-CoV-2 outbreaks in six care homes in London, April 2020", *EClinicalMedicine*.

16) The Guardian(2020.11.14), "Don't put key workers at end of the Covid vaccine queue, warn UK union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nov/14/dont-put-key-workers-at-end-of-the-covid-vaccine-queue-warn-uk-unions>

17) ONS, 앞의 보고서.

비자업무 지연 등에 따른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 부족 우려

영국 공공서비스 노동조합(Unison) 등은 보건복지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근 비자업무 지연과 높은 발급 비용으로 인해 비자발급과 연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¹⁸⁾ 보건복지 부문에서 약 12만 2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비자정책으로 인해 해당 부문 필수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고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응할 여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 의사협회는 외국인 의료인력에 대한 무기한 비자발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초 영국 정부는 국민건강서비스(NHS) 직원이나 간병인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2020.3.31~10.1 사이에 비자가 만기되는 경우에 대해 1년간 무료로 비자를 연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11월 20일에는 2020.10.1~2021.3.31 기간에 비자가 만기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그 혜택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6,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¹⁹⁾ 그러나 노동조합 등은 이와 같은 혜택이 의사, 간호사 등 최전방 의료인력과 일부 복지인력에겐 적용되며, 수천여 명에 달하는 의료 보조인력 및 지원인력은 여전히 비자발급 및 연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맺음말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의료진, 역학조사관 등 특정 직업군 노동자들의 역할과 희생이 더 크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이 겪는 위험에 보다 관심을 갖고 처우 등을 개선하

18) The Guardian(2020.11.9), "Visa rules forcing migrant NHS workers to leave UK amid Covid second wave",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nov/09/visa-rules-forcing-migrant-nhs-workers-to-leave-uk-amid-covid-second-wave>

19) 영국 정부 홈페이지, "Thousands more health workers to benefit from visa extensions", <https://www.gov.uk/government/news/thousands-more-health-workers-to-benefit-from-visa-extensions>

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신 우선 접종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면서도 민감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 전부터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효율적이면서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를 기부²⁰⁾하거나 슈퍼마켓 이용 시 할인을 제공²¹⁾하는 등 영국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 사례들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립**

20) 베드포드(Bedford)에서는 지난 11월 16일까지 총 100대의 자전거가 국민건강서비스 직원들에게 기부되었다(Bedford Today(2020.11.16), “100th free bike donated to key worker in Bedford”, <https://www.bedfordtoday.co.uk/news/people/100th-free-bike-donated-key-worker-bedford-3037470>).

21) 슈퍼마켓 브랜드 모리슨스(Morrisons)는 16개 직업에 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10%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Daily Star(2020.11.21), “Morrisons is giving 10% off to key worker Brits in any of 16 job roles”, <https://www.dailystar.co.uk/real-life/morrisons-giving-10-key-worker-23045222>).